거리두기 해제에 몰려드는 환자…대학병원 '고심'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호흡기내과 환자 급증…CT촬영 물리적 한계
문진 과정에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 포함, 대기시간 크게 늘어 '답답'
가벼운 증상에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환자 불편 최소화 대책 고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광주지역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대학병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에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호흡기내과 등의 검사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커졌지만, 공간과 인력이 부족해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달 평균 6만2392명이었던 외래 환자가 4월부터 8월까지는 한달평균 7만468명으로 늘었다.

8월 한달에만 7만4167명이 외래 진료를 봤다. 하루평균 2400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보기 위해 전남대병원을 찾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전남대병원에서는 CT 촬영시 물리적 한계인 하루 360여건 촬영을 해 왔으나 늘어난 환자때문에 하루 450건의 촬영을 해야하는 형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선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한달동안 조선대병원에는 3만7676명의 외래 환자가 찾아오는 데 그쳤으나 올 8월에는 4만5223명이 진료를 받아 2년 사이 20% 증가했다.

지난 2020년에는 한달 평균 4000여건의 CT 영상을 촬영했으나 최근에는 5200여건을 촬영해야 할 정도로 환자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절대적인 환자 수 증가도 원인이지만 문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가 포함돼 대기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코로나 이후 가벼운 증상에도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전남대병원을 찾은 김민준(30)씨는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 터라 오래 전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것을 기점으로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아파도 많이 참았던 건지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호흡기내과를 방문한 김모(75)씨는 "코로나 격리기간이 끝난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침이 심해 병원을 다니는 중이다"며 "사람이 많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요즘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진료 한 번 받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해 답답하다"고 혀를 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10년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내원 일수는 3337만 7000여일이었으나 2020년에는 3944만 3000여일로 18.1% 증가했다.

대형 대학병원들은 대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검사기기를 늘리거나 인력을 추가하려해도 공간부족과 허가가 나기까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했다.

경증 환자를 인근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전남대병원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 방식과 심사 과정 등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시범사업 시행일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당초 지난 7월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오는 12월까지 발표를 미뤘다고 전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올 초부터 코로나 이전보다 노동 강도가 확실히 높아졌다면서 직원을 더 채용해 달라는 요청이 부쩍 늘었다"며 "병원에서도 진료 과정을 단순화하고 야간 진료 등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병원 원무과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29일 접수를 하기 위해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 원·하청 관계자 3명 영장 신청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내 광주·전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된 여천NCC㈜ 여수공장의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전남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NCC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설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폭행 피소 광주 구청장 경찰,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경찰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된 광주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행(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현직 광주 A구청장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구청장의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대질 신문 등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A구청장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구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 송이도 풍력발전 변전소 설치 갈등

주민들 행정심판 청구 공사중지 결정 받았지만 시공사 작업 진행에 반발

영광군 송이도에 풍력발전소 변전소 설치를 놓고 시공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변전소 허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공사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공사중지기간에 시공사가 관련 작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날 영광군이 송이도에 내준 변전소(건축면적 1489㎡) 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민원은 이날을 포함 지난 2일과 15일 등 총 3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364MW) 과 관련, 단지와 한전 선로를 잇는 변전소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로 지난 6월 영광군으로부터 송이도에 변전소 설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회 또는 사전고지 등의 행위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러한 취지로 지난달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영광낙월해상풍력발전은 아직 착공신고 전 이라는 점 ▲변전소의 위치가 해안에 가깝고 1.7㎞ 떨어진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본안 판결전 까지 건축허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이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이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광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영광군은 민원이 접수 될 때마다 A업체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지질 검사와 해수면 상의 공사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변전소 시공사 전 대표가 현 영광군수와 친인척 관계라서 봐주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종만 영광군수는 "업체 대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교비 1억 횡령' 사립대 총장 2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교비 1억원을 횡령한 전남의 한 사립대 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간접강제금 및 소송 비용 1억362만원을 학교법인이 아닌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법인은 2011년 교수 5명을 직권으로 면직 처분했지만 교수들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는 교원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과 임금 손해배상 비용, 소송 비용 등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돼야 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면서 "A씨의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당한 직후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금원을 회복했지만 범행 경위와 횡령 액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A씨가 부총장으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 공립대학 현직 교수 나주에서 숨진 채로 발견

전남의 한 공립대학 현직 교수가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께 나주시 운곡동 영산강 지류 물줄기에 숨진 채 떠 있는 A(60)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지 않자 지난 28일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확인된 A씨 고향마을 주변에서 수색을 벌여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차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 소지품 등을 놔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남긴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학교 일로 근심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대학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으며 최근 특정 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안을 두고 잡음을 빚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50106	1	여수시 봉계대곡길62, 110동 4층 401호 [봉계동,대광오투빌] 59.9930㎡	아파트	153,000,000 153,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7136	1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 550 536㎡[현황주거용건부지,일부전으로이용중]	전	11,256,000 11,25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제시외건물매각제외
2021타경 57964	1	보성군 겸백면 평호리 24-1 579㎡	전	6,948,000 6,9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보성군 겸백면 평호리 25-1 1150㎡	전	14,950,000 14,9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자동차,중기]					
2022타경 52737	1	사용본거지: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32 등록번호:전남70자3164 차명:뉴그랜버드 연식:2017[검사유효기간자동차등록원부상2021.07.23~2022.07.22.기타[옵션등]:수동변속기형식,에어컨,음향장비,비디오장비,차량용냉장고등부가편의시설설치됨.보험개발원에서제공된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상내차피해없음,상대차피해없음]	자동차	100,000,000 100,0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469-1,이수자동차매매상사[제3자이영균에보관].주행거리자동차계기판상180,319km.사용연료:경유.관리상태보통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기타]					
2021타경 7013	1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93-4 231㎡[현황단독주택부지및일부전으로이용중]	답	21,034,800 21,034,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고흥군 도덕면 율동길 3-13 건평59.94㎡ 부속건물 변소건평3.6㎡[현황소재불명]	단독주택		
2021타경 57841	1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151 354㎡ 제시외가축 등 59.6㎡, 수목 소나무등 23식	대	88,557,700 88,557,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수목[소나무등]포함
		보성군 회천면 장목길 30 단층66.5㎡[현황강판기와지붕]	단독주택		
2022타경 50328	1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628-3 378㎡	대	160,937,000 160,937,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628-3 단층118㎡[주택76㎡ 점포42㎡]	주택및점포		
		동소628-3 1호단층82.6㎡제시외창고76.5㎡	단독주택		
2022타경 53464	1	선적항:여수시 금성리 여수시 작금항 선박종류와명칭:동력선제303엑스포호 어선번호:1410005-6461300 선질:FRP 총톤수:9,77톤 기관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500.000마력1대 추진기종류와수:나선일체식추진기2기 진수년월일:2014년10월28일[어업허가관련사항및매수인갖추어야할어업허가에관한기준과자격등매수신청전에해당관청에확인요]	선박	315,880,940 315,880,940	보관:여수시돌산읍금성리작금항[제3자㈜와이제이마린대표자채영재에게보관].의장품및어업허가포함매각.어업허가받은선박으로그유효기간2023.12.31까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10. 17.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10. 24.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